

민주, 달아오르는 당권 경선... 호남 당원 가입 붐물

주요 선거 국면 한표 행사...광주시당 매일 30~50명 권리당원 접수

송영길·우원식·홍영표 차기 당권 주자 거론... '친문·호남의 선택' 관전

내년 3·9 대선과 오는 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못지 않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도 '실밥상 민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번 설 연휴가 사실상 대선과 재보궐선거를 바라보는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로 꼽히면서 민주당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대권-당권-지방선거' 등이 겹치면서 4·7 재보궐선거를 시작으로 2022년 대선,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는 주요 선거 국면에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당원 가입도 붐물을 이루고 있다. 사

실상 민주당으로서는 재보궐선거와 당권 경선을 통해 몸집을 키우면서 대권과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기회도 맞고 있다.

민주당에선 이낙연 당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1개월 뒤인 오는 3월 9일 이전에 대표직을 내려야 한다. 이는 민주당의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따라 대선(2022년 3월9일) 1년 전 대권에 도전하는 당 대표는 직에서 사퇴하도록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대권주자 격돌이 본격화 하

고 있다. 최근 한 당권 주자가 자체적으로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돌리는 등 도전을 가시화하기도 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신규 당원이 몰리고, 전국적으로 무더기 입당 원서가 접수되면서 사실상 '대권'과 '당권' 경선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현재 송영길·우원식·홍영표 의원 등이 당 대표 주자로 분류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당대표 선거 때 도전하려 했지만 이 대표의 대세론이 굳어지자 출마를 포기했었고 최근 활동폭을 넓히면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고흥 출신인 송영길 의원은 5선 국회의원으로 21대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다. 호남 출신이면서 인천시장을 역임, 인천이 주된 정치 무

대이며 지난 2018년 당대표에 도전해 이해진 전 대표와 경쟁하기도 했다.

우원식 의원은 86세대 운동권 출신 의원들과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연)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최근 윤 총장과 법원을 향해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으며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 민주당 내 전문 모임인 '민주주의4.0 연구원'에 몸 담고 있는 홍영표 의원은 당내 주류인 친문에서도 핵심으로 꼽히는 의원이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의 사퇴 이후 5월께에는 당 대표 경선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당원 모집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최근 민주당 광주시당에는 매일 30~50명의 신규 권리당원이 접수되고 있고, 전남지역에서도 차기 지방선거 출마자들

을 중심으로 한 권리당원 모집이 활발하다.

민주당 당규 제5조는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공직·당직 선거를 위한 선거인 자격 및 추천권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최근 입당이 잇따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대표 경선의 관건은 '친문과 호남의 선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근 흠여졌던 친문 성향의 당원들이 바이블트를 앞두고 다시 입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면서 "당 대표 경선에서도 '친문과 호남의 선택'이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월성원전 수사 '제동'

백운규 전 장관 영장 기각... "검찰권 남용·과도한 정치 수사" 비판

백운규(56)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고발 이후 논란 속에 3개월여간 진행된 검찰의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여권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정치 수사'나 '검찰권 남용'이라는 거센 반발이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원전청와대 관계자 등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직접 챙긴 윤석열 검찰총장의 타격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백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백 전 장관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여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월성 원전 자료 삭제 등 혐의로 산업부 공무원 2명이 이미 구속 기소된 데다 이들의 진술도 확보된 상태여서 백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이 낮다'는 취지 평가 보고서 생산 등 주무 부처의 의사결정권자였던 백 전 장관을 이번 사건 핵심 피의자로 분류하고 조사했던 검찰은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개인 여부를 최종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인물로 백 전 장관을 꼽았던 터라 영장 기각 결정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검은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지만, 더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는 짧막한 공식 반응을 내놨다.

/연합뉴스

황희 "생활비 60만원 잘못 전달돼" 문체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생활비 60만원' 논란과 관련해 잘못 전달된 것이라며 실제 생활비 지출은 300만원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황 후보자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60만원이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며 "언론에 나온 것은 생활비 중에서 집세, 보험료, 학비 등을 빼고 신용카드 쓴 것이 720만원 되는데 단순히 12로 나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 언론은 명절에 들어온 선물로 식비가 많이 들지 않고, 가족들이 미용도 스스로 한다는 황 후보자의 발언을 전하며 월 생활비가 60만원으로 계산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황 후보자는 "제 통장에 잔액이 없을 것이라는 전제로 60만원이라고 계산했는데 실제 생활비 지출은 300만원 정도"라며 "최대한 아끼려는 마음이 있는데 잘못 전달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與 "징벌적 손해, 언론·포털 포함 2월 처리"

TF "가짜뉴스 악의성 판단... 언론 자유 침해 아냐"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인터넷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도입을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에 기존 언론과 포털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 회의를 마친 뒤 "징벌적 손해배상에 언론과 포털이 다 포함된다는 대원칙 하에서 입법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2월 중점처리법안에 이런 원칙을 포함시키고, 미진한 부분은 추후 신속히 입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TF는 유튜브 등 인터넷 이용자가 고의성 있는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윤영찬 의원 발의) 등을 2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언론을 대상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추가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TF 단장인 노웅래 의원은 "1차적으로 가짜뉴

스가 가장 남치는 유튜브나 SNS를 주요 타겟으로 하지는 것이었다"며 "기존 언론을 빠지는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짜 뉴스를 새로 정의하고 처벌하는 방안은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향후 계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털에 관해서는 "포털이 뉴스 공급의 70~80% 이상인데, 가짜 뉴스를 포함해 문벌이 수단의 쓰레기 기사까지도 게재된다"며 "쓰레기 같은 기사를 퇴출할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포털에 대한 관련 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악의성·고의성 등을 고려해 법원이 판단하는 것인데 과잉 처벌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내가 기자 21년을 했는데 과도한 침해가 결코 아니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출석요구

"직접 의혹 밝혀야"...2017년 野 의원에 '인준 찬성 로비' 의혹도 제기

국민의힘은 9일 이른바 '거짓 해명 논란' 등을 비롯한 의혹 해명을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회 법제사법위 출석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에 출석한 바 있어 국회가 요구할 경우 출석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모든 의혹을 국민에게 철저히 밝혀야 한다"면서 17일 법사위 출석을 주장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을 막는다면 자신들의 법관 탄핵 추진은 '사법부 독립'이 아니라 '사법부 길들이기'였음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것"이라며 동침을 촉구했다.

이들은 김 대법원장이 2017년 9월 자신의 임명 동의안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을 앞두고 청문

준비단에 '인준 찬성 로비'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야당 의원들의 출신 지역·학교를 분석해 이와 겹치는 전·현직 법원행정처 판사들에게 '야당 의원들에 연락해 찬성표를 던지도록 설득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임명 동의안 통과 직후 '찬성 로비' 관련 자료가 저장된 법원행정처 PC의 하드디스크를 폐기까지 했다고 한다"며 "김 대법원장이 자신의 지시가 위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 확인에 대한 국회의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수 차례의 요청에도 묵묵부답"이라며 "김 대법원장의 지시로 '거짓말'을 은폐하고 있는 것 아니냐 심히 의심된다"고 했다.

/연합뉴스

토지, 건물, 정원수(아파트용) 매매

1. 토지와 아파트용 정원수 포함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전 9,190㎡
소나무 15년생 외 7종 2천여주 아파트 조경수 포함, 광주 간 25분 신실 4차선 국도 근접.
전원주택, 펜션, 다목적 사용가, 포장도로 접 ㎡ 7만원

2. 상가건물

(1) **광주. 북. 오치 4층** 대 384㎡ 연 998㎡ 사거리 코너 요지
매 16억8천만원 보 2억, 월 6백6십만원

(2) **광주. 동. 총장로5가** 상업지역 도매상 주도로 5층 승강기 유, 대 222㎡ 연 956㎡
보 8천만원 월 4백만원 가, 매 13억원 전면 18m 접

(3) **광주. 동. 대인동시장** 야시장 주도로 코너 점포 8간, 대 238㎡ 연 257.8㎡
주변 아파트 9천여세대 건축 중, 투자 효과 최상 매 9억9천 보 1천6백 월 2백만원, 상업지역

(4) **광주. 북. 문흥동 3층** 상가 대 660㎡ 연 2,000㎡ 상업지역 1층점포 10간
매 51억원 (보 5억5천만원 월 2천2백만원 포함)

3. 전원주택, 가든, 카페 등 용지

(1) **순창 금과 고례리** 광주간 25분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대지 1,163㎡(담 포함) 건물 66㎡
벽돌조 스라브층, 수리사용가, 산아래 마을 뒷 야미산 바라본 정남 매9천9백만원

(2)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0분 메타가로수길 약 70m 접, 계획관리지역
전 4,363㎡ (담 포함), 덕진산자락 정남 경관수려 ㎡ 13만원

(3) **화순 북면 옥리** 금호온천 입구 도로접 계획관리지역, 전 531㎡ 매 ㎡ 18만원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

국민공인중개사 대표 정중기 ☎ **062-268-8289**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삼성출플러스 길 건너면 통광주빌딩 내